千-文 날 선 설전…분열하는 野

천정배 "너나 잘하세요" 발언에 문재인 "무례하다"

비주류 "신당 파괴력 예측불허"…총선 주도권 경쟁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주도권 경쟁에다 감정싸움까지 보태진 모습이다.

우선 천 의원이 전날 신당 창당 기자회견에서 문 대표의 '통합 제안'에 대해 "'너나 잘해라'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문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 "무례한 말"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 대표는 이어 천 의원의 신당 창당을 '분열'로 규정하며 "호남 민심 역행", "호남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안 전 대표가 전날 "대법원 판결을 불복하는 태도는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안 전 대표가 저간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정치혁명을 '분열'이라고 하는 건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천 의원은 "신당을 만들겠다는 사람한테 입당하라는 것은 예의가 있는 발언이냐"며 문 대표의 '무례하다'는 발언에 대해 맞받아쳤다.

새정치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파별로 확연한 신당에 대한 시각차가 감지됐다.

주류 측의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신당은 창당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노동당처럼 전혀 다른 색깔, 지향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당을 만들 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유권자들의 질타는 당연한 것이고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이 신당에 대한 요구로 작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영표 의원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에 대해 "우리 당이 제1야당으로서 위상을 되찾게 된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주류측 문병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혁신하고 통합을 이루느냐, 총선 비전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큰 태풍이 될 것인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지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으로 총선 승리를 이루기 힘들고 패권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새로운 정치흐름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탈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 의원이 문 대표에게 "'너나 잘해라'는 말이 생각났다"고 한 대목에 대해서도 "문 대표의 행보를 봤을 때 정치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뭔가 정치협상을 할 때에도 알맹이가 있어야 하는데 정치에 입문한지 얼마 안 돼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비주류 성향의 전남지역 모 의원은 "문 대표가 실력 행사로 재신임을 받아냈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화통하게 껴안고 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재신임투표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문 대표가 스스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해서 발생한 재신임 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전날 연석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비주류 등에서는 문 대표의 재신임을 '셀프 재신임'이라고 저평가하고 있으며 아직도 문 대표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내 계파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감장서 언급된 '호반건설'…배경 뭘까 이목 집중

국감 현장-광주국세청

광산세무서 신설 촉구도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중견건설사인 호반건설이 언급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오후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질의 도중 호반건설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호반건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얘기가 있다. 조사하고 있습니까"라며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조사에 관한 개별정보는 밝힐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후 박 의원은 호반건설에 대한 추가 질문 없이 다른 질의로 넘어가 호반건설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호반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역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는데,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질의를 계기로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신 청장이 국세청의 조사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부인도 하지 않아 관련 조사가 일정 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국세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수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세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광주 광산구 지역은 관할인 서광주세무서에서 이동 평균 거리가 멀게는 약 30㎞에 달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광주세무서의 담당구역이 광주 서구와 광산구, 전남 영광군으로 관내 인구만 76만3000여 명에 달한다"며 "광주시내 3개 세무서 중 관할지역의 인구가 가장 많아 광산세무서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과 신계륜 의원 등 일부 의원들도 서광주세무서 분서를 통한 광산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국감 인물

김무성 대표 사위 수사·판결 부실 의혹 제기

최경환 부총리 인턴 채용 불법 행위 따져

임내현 새정치 의원

"임내현 의원이 달라졌다."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다.

그동안 친정인 검찰은 물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그치기보다는 비교적 온화한 질의 모습을 보여 왔던 임내현 의원이 올해 국감에서는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강력한 책임 추궁에 나서면서 검찰과 법원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에 대해 부실 수사 의혹을 강력 제기한 것은 물론, 공범들의 전과기록 허위 제출 등을 밝혀냈다.

14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김영호 감사위원으로부터 "20대 총선에서 진주지역구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내고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15일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주문, 장애인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18일 대구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증거 판단 부실을 지적한데 이어 같은 날 대구고검 국감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인턴 채용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따져 이 문제가 이미 검찰에 수사 의뢰가 됐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2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군내 사망자의 경우, 단 1건을 제외하고 배상금이 모두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며 "군이 자식 잃은 부모를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 강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임내현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겐 관용을 베풀되 법 앞에서는 어떠한 특권도 인정되지 않도록 법원과 검찰에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라도 쌀 경기미와 비교 푸대접 현실 질타

농어촌공사 임직원 자녀 채용 부조리 지적

황주홍 새정치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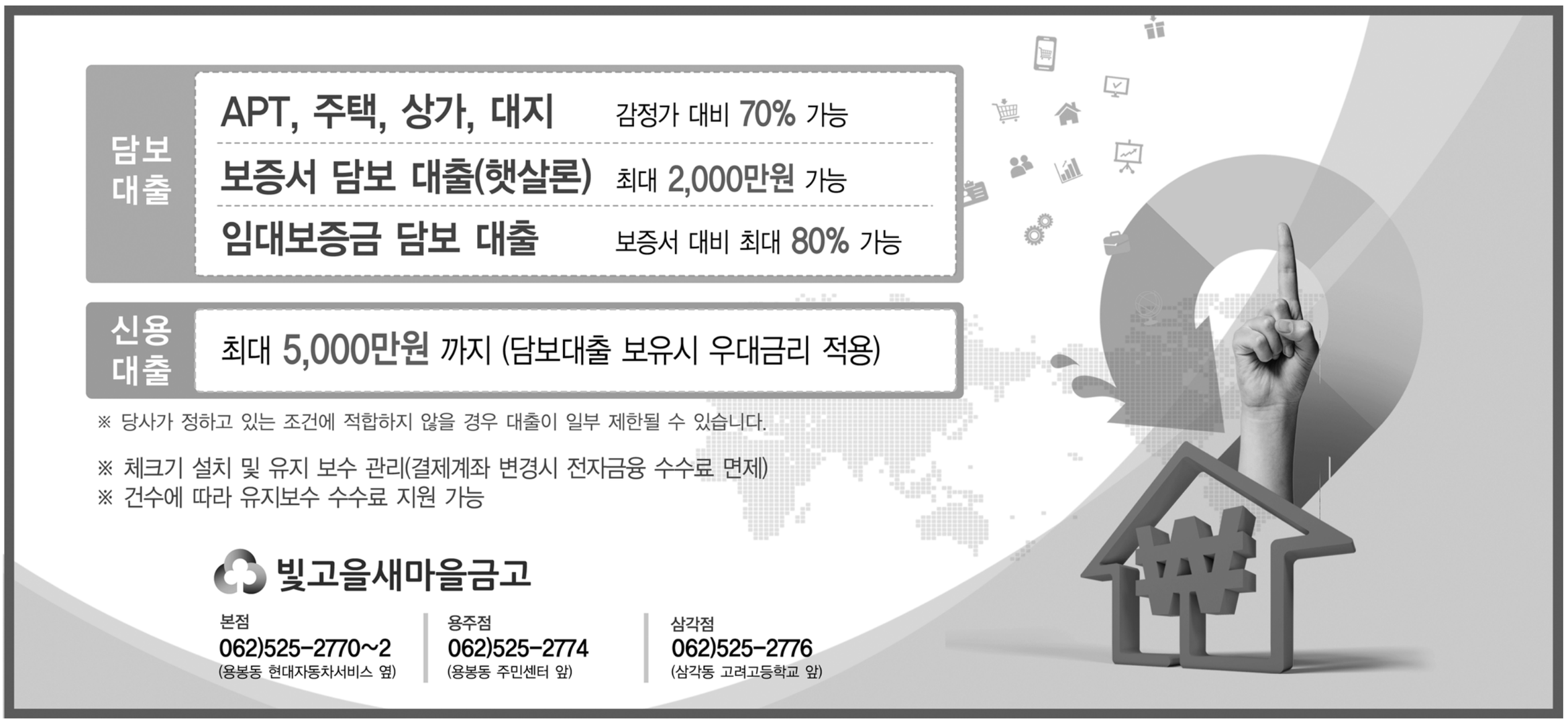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올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활약이 눈부시다는 평가다.

21일 정치권과 황 의원 측에 따르면 황 의원은 특유의 성실함을 앞세워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국감 이슈를 만들어내며 농해수위 국감을 주도하고 있다.

우선 황 의원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 국사에서 롯데상사 김영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 롯데상사의 쌀 도정사업 진출 계획을 따져묻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이에 롯데상사 측은 "농민들이 반대한다면 당장 중단하겠다"며 사업 철회를 약속했다. 그는 "FTA와 밥쌀 수입 등 가뜩이나 불안한 농민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전라도 쌀의 우수성을 경기미와 과학적으로 비교해 전국에 알리는 한편 푸대접받는 현실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이어 "법 어디에도 8월 가격의 90%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으로 집행하라는 조항은 없는데도 농식품부는 계속해서 관행에 빠져 자신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쌀값에 대한 농민의 희망이 담겨있는 기준치인 우선지급금까지 낮춰서는 안 될 일이고 최소한 2013년 수준(5만5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인하 계획 철회시켰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농어촌공사 임직원 자녀를 무기계약직 채용하는 부조리를 지적, 무기계약직 채용 규정의 연말 개정 약속을 받아냈으며 산림청이 1등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시중 유통한 점을 지적, 관련 제품의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주부터 단속에 착수하도록 유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